

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

※ 페이지는 19년도 지침 기준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3	<p>가.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가.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</p> <p>참고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므로(「민법」 제31조), 사회복지법인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서만 성립됨 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2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「민법」 제34조에서는 “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,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음 -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(예: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)에는 「민법」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“법률에 규정을 좇아”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	<p>사회복지법인의 권리 능력 명확화</p>
20	<p>가. 이사회</p> <p>1) 이사회의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사 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 이상을 「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선임 	<p>가. 이사회</p> <p>1) 이사회의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사 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 이상을 ‘사·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(근거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)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	<p>법령개정(18.4.25.~)에 따라 외부추천기관 및 추천배수를 확정적으로 기재</p>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									
	<div>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기관</div> <table> <tr> <th>구 분</th> <th>~'18.4.24.</th> <th>'18.4.25.~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추천기관</td> <td>사회복지위원회</td> <td>사·도 사회보장위원회</td> </tr> <tr> <td>지역사회복지협의체</td> <td rowspan="2">지역사회보장협의체</td> </tr> <tr> <td>지역사회보장협의체*</td> </tr> </table> <div>* 기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을 추천기관으로 규정하고,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추천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았으나, 법제처 해석[법제처 16-0179, 2016.7.27., 복지부]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추천기관에 추가</div> <div>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법률 시행일에 따른 추천 배수(倍數)</div> <div>— 시행일('18.4.25.)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아사 정수의 1/3(소수점 아하는 버림) 이상을 추천기관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</div> <div>— 시행일('18.4.25.) 이후부터는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</div> <div>※ 주의 : 사회복지법안의 추천요청 시점이 시행일('18.4.25.) 이전이라도, 실제 추천일이 시행일 이후라면 반드시 3배수로 추천하여야 함</div>	구 분	~'18.4.24.	'18.4.25.~	추천기관	사회복지위원회	사·도 사회보장위원회	지역사회복지협의체	지역사회보장협의체	지역사회보장협의체*	<div>〈삭 제〉</div>	
구 분	~'18.4.24.	'18.4.25.~										
추천기관	사회복지위원회	사·도 사회보장위원회										
	지역사회복지협의체	지역사회보장협의체										
	지역사회보장협의체*											
33	<div>라. 임원의 임면(任免)</div> <div>임원의 결격사유(법 제19조)</div> <div>1의8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<u>성폭력범죄</u>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)</div>	<div>라. 임원의 임면(任免)</div> <div>3) 임원의 결격사유(법 제19조)</div> <div>1의8.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<u>성폭력범죄</u>*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)</div>	법령 개정 사항 반영									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	<p>〈신 설〉</p> <p>2의2.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(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8.10.25.시행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참고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, 개정 법령에서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일괄 규정(적용대상 : 시행일(2019.6.12.) 이후 최초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)</p> <p>2의2.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(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8.10.25.시행)</p> <p>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(2018.10.25.시행)</p> <p>제10조의2(임원의 결격사유)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(이하 “취소사유”라 한다)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표이사 2. 감사. 다만,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나.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3.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. <p>※ 적용대상 : 시행일(2018.10.25.)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</p>	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34	<p>라. 임원의 임면(任免)</p> <p>3) 임원의 보충(법 제20조, 규칙 제11조)</p> <p>●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 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</p> <p>※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</p>	<p>라. 임원의 임면(任免)</p> <p>4) 임원의 보충(법 제20조) 및 임시이사 선임·해임(법 제22조의3, 제22조의4, 규칙 제11조)</p> <p>가) 임원의 보충 및 임시이사 선임</p> <p>-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(법 제20조),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(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, '19.7.16. 시행)</p> <p>①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(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후 2개월 이내)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(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)</p> <p>②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(법인이 시·도지사로부터 임원 해임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)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(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)</p> <p>* (참고) 개정 전 임시이사 선임 사유 : “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”</p> <p>- 임시이사는 상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함</p> <p>-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음</p> <p>-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</p> <p>-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,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</p>	임시이사 내용 추가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		<p><u>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함(법 제22조의3제5항 '19.7.16. 시행)</u></p> <p><u>나) 임시이사의 해임</u></p> <p><u>-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함.</u></p> <p>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</p> <p>②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③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</p> <p>④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<u>- 법인은 상기 사유로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</u></p>	
35	<p>4) 임원의 겸직금지(법 제21조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5) 임원의 겸직금지(법 제21조)</p> <p>참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</p> <p>※ 지자체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법인은 공공단체이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인인 임원이 될 수 없음(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-2163(2018.7.4.))</p>	<p>사회복지법인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관련 행안부 해석내용 기재</p>
36	<p>5) 임원의 해임명령(법 제22조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6) 임원의 해임명령(법 제22조, 영 제10조의3)</p> <p>● <u>해임명령은 시·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.</u></p> <p><u>-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</u></p> <p>1. <u>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</u></p>	<p>법령 신설사항 반영</p>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		<p>2.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·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,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(背任)행위를 한 경우</p> <p>●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(법 제22조제3항, '19.7.16. 시행)</p>	
37	<p>라. 임원의 임면</p> <p>〈신 설〉</p>	<p>라. 임원의 임면</p> <p>7) 임원의 직무집행정지(법 제22조의2)</p> <p>●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</p> <p>- 다만, 법 제18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함(법 제22조의2제1항단서, '19.7.16. 시행)</p>	직무집행정지 관련 내용 추가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
46	<p>가. 기본재산 처분허가(법 제23조, 규칙 제14조)</p> <p>1)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>-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(도시계획 보상금 수령,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)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.</p> <p>〈신 설〉</p> </div>	<p>가. 기본재산 처분허가(법 제23조, 규칙 제14조)</p> <p>1)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>-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 등은 반드시 정관변경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(도시계획 보상금 수령, 처분액 차이로 인한 이익금 등)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.</p> <p>※ 보상금의 이자 역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며,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지체없이 보상금과 관련된 과실(果實)을 즉시 기본재산으로 편입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자를 활용하여야 할 것임</p> </div>	보상금의 이자처리 관련 사항 기재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49	<p>가. 기본재산 처분허가(법 제23조, 규칙 제14조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가. 기본재산 처분허가(법 제23조, 규칙 제14조)</p> <p>3)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(법 제23조 단서 및 시행 규칙 제14조) - 여기서 “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”란 다른 조건의 변동없이 단순히 임대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함 ※ 종전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,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계약과는 다르게 정하여 종전의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불필요한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(법제처 해 석례 [17-0694, 2018.2.14., 민원인] 참고) 	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사항 기재
50	<p>다.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(법 제24조, 규칙 제16조)</p> <p>1) 재산의 취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,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<p>〈신 설〉</p> <p>2) 정관의 변경</p> <p>〈신 설〉</p>	<p>다.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(법 제24조, 규칙 제16조)</p> <p>1) 재산의 취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, 매년 3월말*까지 전년도 재산취득 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※ 종전 보고시한은 1월말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('19.1.4. 시행)으로 '19년도부터는 3월말로 변경 <p>2) 정관의 변경</p> <p>참고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소유 가능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는 자만 농지소유 가능 ○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지법」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별표2) 및 제6조에 	<p>재산취득보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</p> <p>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 관련 내용 추가</p>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		<p>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실습지로 이용하는 경우 취득 가능</p> <p>- 「농지법」(법률 제8352호, 2007.4.11.) 부칙 제4조에 따라 1996.1.1.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는 계속 소유 가능</p> <p>※ 사회복지법인 농지취득인정의 추천기관에 대한 농림부 회신(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-3993(2017.8.30.))</p> <p><질의내용></p> <p>- 사회복지법인이 시험지·연구지·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취득인정 추천을 해야하는 “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의 범위</p> <p><회신내용></p> <p>-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와 시도지사가 법률상 사회복지법인 설립, 허가취소, 지도·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시·도지사가 추천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</p> <p>- 향후 법령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</p>	
54	<p>나. 법인해산(解散)의 사유(「민법」 제77조)</p> <p>3) 설립허가의 취소(법 제26조)</p> <p>●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</p> <p>-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<u>성폭력 범죄</u>가 발생한 때</p> <p><신 설></p>	<p>나. 법인해산(解散)의 사유(「민법」 제77조)</p> <p>3) 설립허가의 취소(법 제26조)</p> <p>●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</p> <p>-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<u>성폭력 범죄 및 학대관련범죄</u>가 발생한 때</p> <p>참고 취소사유 적용 시점</p> <p>※ 기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6조제1항제6호에서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“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”를 규정하였으나, 개정 법령에서는 학대관련범죄를 추가</p> <p>→ 시행일('19.7.16.)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</p>	법령 개정사항 반영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60	<p>나. 사·도지사(법 제51조 등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나. 사·도지사(법 제51조 등)</p> <p>●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 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 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(2019.6.12.시행)</p> <p>-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,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*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</p> <p>※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해당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(2019.6.12.)</p>	법령 개정 사항 반영
64	<p>〈신 설〉</p>	<p>바. 종사자 채용 및 결격사유 조회</p> <p>●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(법 제35조의3, '19.6.12. 이후 종사자 채용시 적용)</p> <p>- 사회복지법인에서 해당 법인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안됨</p> <p>-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</p> <p>※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 시, 법 제5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</p> <p>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(35조의2)</p> <p>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, 제35조,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 조(범죄경력조회·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)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</p>	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사항 내용 추가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								
		<div> <div> <div>-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(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)</div> <div> <table> <tr> <th>조회 주체</th> <th>목 적</th> </tr> <tr> <td>본인</td> <td>본인 스스로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</td> </tr> <tr> <td>설치·운영자</td> <td>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</td> </tr> <tr> <td>지자체장</td> <td>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</td> </tr> </table> </div> </div> </div>	조회 주체	목 적	본인	본인 스스로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	설치·운영자	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	지자체장	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	
조회 주체	목 적										
본인	본인 스스로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										
설치·운영자	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(제3자에게 제출 불가)										
지자체장	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고용의 합법성 확인										
117	<div> <div>가. 예산의 편성</div> <div>3)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</div> <div>○ 별표1 ~ 별표8에 따른 세입·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</div> <div>※ 시설회계 세출예산(별표4)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)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, 또는 2)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</div> </div>	<div> <div>가. 예산의 편성</div> <div>3)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</div> <div>○ 별표1 ~ 별표10에 따른 세입·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</div> <div>※ 시설회계 세출예산(별표4)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</div> </div>	<div>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구분표(별표10) 신설에 따라 시설회계 세출예산(별표4)의 법인회계전출의 사유 중 ‘장기요양기관인 경우’ 삭제</div>								
117	<div> <div>다.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</div> <div>2) 방법 :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확정</div> <div><신 설></div> </div>	<div> <div>다.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</div> <div>2) 방법 :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·확정</div> <div>-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</div> </div>	<div>법령 개정 사항 반영</div>								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118	<p>바. 예산의 전용</p> <p>3) 전용의 제한 :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,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·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바. 예산의 전용</p> <p>3) 전용의 제한 :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,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·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</p> <p>-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</p>	법령 개정 사항 반영
122	<p>가. 회계 총칙</p> <p>4)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: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</p> <p>※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. 다만,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가. 회계 총칙</p> <p>4)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: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</p> <p>※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. 다만,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함.</p> <p>● <u>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매년 7월 15일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</u></p> <p>- <u>상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</u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1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·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(이하 "주·야간보호기관등"이라 한다)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: 2018년 5월 30일</p> <p>2.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제1항제1호·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(이하 "방문요양기관등"이라 한다)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, 2018년 1월 1일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: 2018년 5월 30일</p> <p>3. 주·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</p> </div>	법령 개정 사항 반영

페이지	2018년	2019년	비고
		<div> <p>기관: 2019년 5월 30일</p> <p>4.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, 2018년 1월 1일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: 2019년 5월 30일</p> </div>	
127	<p>가. 후원금의 접수</p> <p>3)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</p> <p>●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,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</p> <p>※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의4</p>	<p>가. 후원금의 접수</p> <p>3)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</p> <p>●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,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(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41조의4)</p> <p>※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</p>	후원금의 이자 사용 관련 사항 추가
130	<p>나. 후원금의 관리</p> <p>4)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</p> <p>① 지정용도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별표 2, 별표 4, 별표 6, 별표 8의 세출 “목” 및 “내역”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될 것</p>	<p>나. 후원금의 관리</p> <p>4)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</p> <p>① 지정용도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별표 2, 별표 4, 별표 6, 별표 8, 별표 10의 세출 “목”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,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</p>	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후원금의 용도 지정 관련 문구 명확화